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5
----------	----

발의년월일 : 2002년 10월 29일

제안자 :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지역의 운명은 지역민이 결정한다”는 모토로 중단 반세기만에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가 11년째를 지난 상황에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화, 세계화, 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 주민의 대표자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 맞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의정제일의 목표를 주민 복리증진에 두고 헌신해 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법적, 제도적 조건과 열악한 의정환경에서는 새로운 21세기에 부합하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기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및 전문적인 정책개발과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전개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직원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고, 의회직원이 없어 전문성을 가지고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집행부에 대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 이어 “그 사무에 관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정신에 걸 맞는 자치입법권을 심각히 제약하여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2항에 의해 상임위원회 구성인원은 의원정수 13인 이상으로 되어있어 일부 도시 및 농촌지역 기초의회에서 업무과다 및 도시 의회 및 농촌지역간

주민대표성 불균형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전국 시,군,구 의장회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제기만 될 뿐 막상 의결단계에서는 유야 무야 되어 있음.
-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포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

“지역의 운명은 지역민이 결정한다”는 모토로 중단 반세기만에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가 11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소 미흡한 점들도 있었지만 부활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지방자치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확대, 일상생활 속에서 자치의 원리가 뿌리내리는 것으로 증명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지방화·세계화·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 없이 공부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의정제일의 목표를 주민복리증진과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두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의회 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 주민의 대표자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 맞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법적, 제도적 조건과 열악한 의정환경 하에서는 새로운 21세기에 부합하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목포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방자치의 개혁과 전진을 위해 그 동안 전국 시·군·구 지방의회의장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개정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조항 등에 대해 다음사항의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다시금 저희의 주장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1.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연간 80일의 회의출석과 의안심사자료 수집 등 일상적인 상임위활동, 설
새없는 지역민원처리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면 상시적인 시간
과 경비를 의정활동에 할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의회활동을 형식적으로 흐르게
하거나,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의회로의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면 각계각층의 전문성
있는 이들과 지방자치에 대한 폭넓은 세대의 진출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및 관련조항의 개정을 통한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반드시 도입되
어야 합니다.

2.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의
회직원은 어쩔 수 없이 집행부와 의회의 눈치를 동시에 살펴야 하고, 일반행정직 중 의회
직렬이 없어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를 사명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가지고서 지방의회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뒷받침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소속감과 사명감,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및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지방
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의회직렬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3.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와 “그 사무에
관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정신에 걸 맞는 자치입법권을 심각히 제약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신은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입니다. 자치입법권 또한 여기에 부합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으로 개정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조례
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법 제17조와 제20조 등의 자치입법권 제약조항을 개정하여야 합

니다.

4.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의원수 13인 이상일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231개 기초의회 중 13인 미만 총97곳의 의회가 본회의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인구 27만명인 금천구는 12명 의원으로 상임위원회가 없는 반면 인구 3만4천명인 경남의령군의회는 13명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업무과다 및 도시의회와 농촌지역간 주민대표성의 편차가 너무 심하며, 대표성의 불합리가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현행 “13인 이상”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상임위원회 구성인원을 “11인 이상”으로 하고 의원정수 11인 미만의 의회일 경우 긴급한 현안이나 각종 의사일정을 협의할 1개의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규모와 업무량의 대소를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목포시의회의원 일동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문제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4가지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고 행동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2년 11월 일

목 포 시 의 회 의 원 일 동